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을사년 202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이고 을사늑약(1905)이 체결된지 100년이 된다. 고대 한일양국은 친선과 우호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삼국과 가야인들은 일본에 건너가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전파해 6세기 말부터 7세기 일본 고대 국가 전반기의 아스카 문화와 후반기의 하쿠호 문화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백제는 왕인(천자문과 논어)과 아직기(한자)가 유학, 천문, 불교를 전해줬고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국보 1호), 백제 관음상 등으로 일본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고구려는 불교와 미술, 종이 등을 전파했고 쇼토쿠 태자의 호류사 금당 벽화를 남겼다. 신라는 조선술과 축제를 전해 일본에서 ‘한인의 연못(저수지)’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가야는 일본 철기 문화에 기여했다. 이런 우호적인 한일양국의 문화교류는 필자가 오사카 나니와궁터(難波宮跡)에서 참관한 고(故) 이회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주도로 1990년부터 시작된 올해 35주년 ‘사천왕사(시텐노지) 왔소’ 축제를 통해 도래인(渡來人)과 일본인의 행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 조반기는 왜구의 약탈로 토벌과 회유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중반에 들어 한일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과 재일동포 경제인

계는 명(明)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 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의 임진왜란(1592)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1차례 400~500명 규모의 조선통신사가 파견됐지만 우호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선은 1876년 불평등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체결로 일제 침략이 노골화돼 식민지가 됐다. 한국은 1942년 1월1일 26개국 연합국 공동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포고를 주장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48개국의 승전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 후 한일양국은 냉전시대 미국의 회유와 간섭으로 1965년 무상 경제협력 3억 달러와 정부 및 민간 차관 5억 달러 지원의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한일관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래로 지난 60여 년 동안 3차례(1980년·1998년·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이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5천 달러를 넘어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에서 재일동포 경제인의 역할이 있었다. 재일동포 경제인은 한반도 출신이거나 민족적 뿌리를 지닌 기업가로서 일본 사회의 취업 차별과 배타적 분위기를 극복하는 반동 이론(Reactive Theory), 금의환향을 지향하는 문화적 특성, 그리고 동족간의 강한 사회적 연대로 자원을 총동원하는 민족네트워킹로 틈새시장을 통해 주변 산업으로 진출하여 성공했다.

본격적인 재일동포 1세 경제인의 활동은 1991년 5·16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정권 출현

에서 비롯된다. 한국정부는 1961년 12월 민단 재일동포 1세 기업가 50명을 한국에 초청하고 1966년 외자도입법을 공포 및 시행하면서 1967년 모국초청사단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와 구로공단이 설립됐다. 그 후 재일동포 1세 기업가들의 모국 투자는 1967년 신격호의 롯데제과 설립, 1974년 한국투자협회 설립, 1982년 이회건 회장의 신한은행 창립, 1987년 김희수 회장의 중앙대 인수로 이어졌다. 1992년부터 1996년 3월까지 일본 투자 2천676건(53억5천만 달러) 중 재일동포의 모국 투자는 176건에 달했다. 이런 모국 투자는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지금 일본 거주 재일동포(귀화자 포함)는 80만 명 수준으로 고령화되고 다름은 30만 여명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일동포 올드캐머의 2~4세와 뉴커머 기업가들은 모국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확대로 이어지지만 여전히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지금의 한일관계는 30년 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전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의 담화(199년 8월15일)와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10월18일)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 그 후 일본은 역사교과서, 위안부 및 강제 징용피해자 문제, 독도 영유권, 내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등으로 사죄와 보상보다는 왜곡과 혐오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한걸음도 미래로 나가지 못한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전남권 통합 의대 개교 지연 가능성에 아쉬움과 우려

목포대와 순천대학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신설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선 교육부가 12월에 통합대학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양 대학은 교명도 확정받을 계획이다. 내년 초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정원 배정을 위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동·서부권 갈등 유발, 대학 구성원 반발 등을 우려해 양 대학 총장을 유지하는 형태인 ‘유연한 통합’을 규제 특례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 사례임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 통제합심사위원회의 1명의 총장이 캠퍼스 부총장을 지명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30년 개교 가능’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사 수급추계위 등 과정을 역순으로 따져 서둘러 추진해도 2030년 개교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남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속히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2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자 소망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연내 마무리, 2026년 2월까지 확정해 달라고 시정도 명시했다.

정부는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전남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양 대학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정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삼급종합병원 부재로 고난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심각한 불균형으로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국가적 과제다. 당국의 2030년 설립 의견에 아쉬움과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 발의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와 대학들은 통합대학 의대 신설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다. 연말연초,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027년 개교 현실화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따른 쌀값 상승 반길 일만은 아나

모처럼 쌀값이 상승해 농업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산지 80kg기준 22만7천816원으로, 전년보다 4만15천여원 높게 형성됐다.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인데 따른 영향이다. 특히 전남지역이 전국 최대 규모로 감축했다. 농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국가데이터저장소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서 전남이 5천255ha를 차지, 단연코 두드러졌다. 이어 충남 4천515ha, 전북 3천629ha, 경북 2천723ha, 경남 2천254ha 순이다. 감소폭 역시 전남이 3.6%로 가장 높다. 사·도 가운데 독보적 1위다. 정부는 올해 8천ha를 대체하는 조정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전남도는 벼 농가와 논 타작물 재배농가 모두 원·원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추세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 등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달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 10만t을 시

장격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말 예정된 국가데이터저의 쌀 소비량 발표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밀하게 재전망할 계획이어서 주목받는다.

2025년산 쌀 생산량은 353만9천t으로 예상치보다 3만5천t 감소했다. 다만, 생산단수는 522kg/10a로 전년(514kg) 및 평년(518kg)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 벼 재배를 줄여서 쌀값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근원적인 대책으로 부족하다. 일상화된 기후변화, 병충해 발생 등 돌발 변수에 기인한 혼란까지 염두에 뒀야 한다. 올해도 가을철 잦은 비로 지연됐던 수확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산지 쌀값은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와 쌀값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밥쌀 수요가 계속 내리막길이라 해도 지금도 국민의 대표 주식이다. 식량 보호주의 흐름의 국제 제세와 맞물려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정 기관·단체, 연구소 간 인공지능(AI) 기반의 통합 모델링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당국은 격리 여부를 보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예측의 정확도를 더 제고해야 한다.

기고



김 순 권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

요즘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민심의 향배를 분석하고, 후보자들은 그 수치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뜻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민심의 온도계’이자, 사회 변화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현실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조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문항을 설계하거나, 통계적으로 부적절한 모집단을 선택해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여론조사를 방자한 조작과 허위 홍보는 헌법

여론조사는 ‘민심의 온도계’...객관성·공정성 바탕돼야

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 당국은 이러한 불법 여론조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해야 하며, 각 정당 또한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편법적 여론조사에 기대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후보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단호히 배제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이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다. 여론조사는 그 천심을 가장 가깝게 읽어내는 과학적 장치다. 따라서 공정하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후보는 국민이 선택한 인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기 사람 심기’식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민심보다는 사심을 앞세워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자기 측근을 공천하려는 시도는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한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의 뜻 위에 행사돼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소수의 정치적 계산이나 파벌 논리에 따라 후보를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정치 내란행위와 다를 바 없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일방적 통보를 수용하지 않는다. 정보가 개방되고 시

민의식이 성숙한 시대에 민심을 거스르는 공천은 정당의 자멸을 의미한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절차만이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정신은 바로 이러한 순리의 정치, 즉 민심과 당심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 정치의 실현이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당심이 민심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 선거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다. 불법 여론조사나 편향된 공천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세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된다.

정당과 정치인 모두가 여론조사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견인하지만, 조작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민심을 과학적으로 읽고 존중하는 정치는 국민이 체감하는 희망으로 이어진다.

민심을 거스르는 불공정한 공천은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치권은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을 거스르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과학적 여론조사를 존중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지키는 정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이다.

독자투고

해마다 연말연시면 습관처럼 해 오던 음주운전,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아지므로 인해 자동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적용되며, 0.03~0.08%는 면허정지, 0.08%이상은 면허취소이다. 0.03%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3~0.08%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0.08% 이상은 벌금 1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이다.

0.2%이상은 벌금 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로 가중된다.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되며, 재범 시 징역형 등 선고 가능성이

음주운전, 후회는 행동한 뒤에 따라온다

높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형을 보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제일 많다. 또 집과 거리가 가까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 앞 근처에서 적발되는 경우,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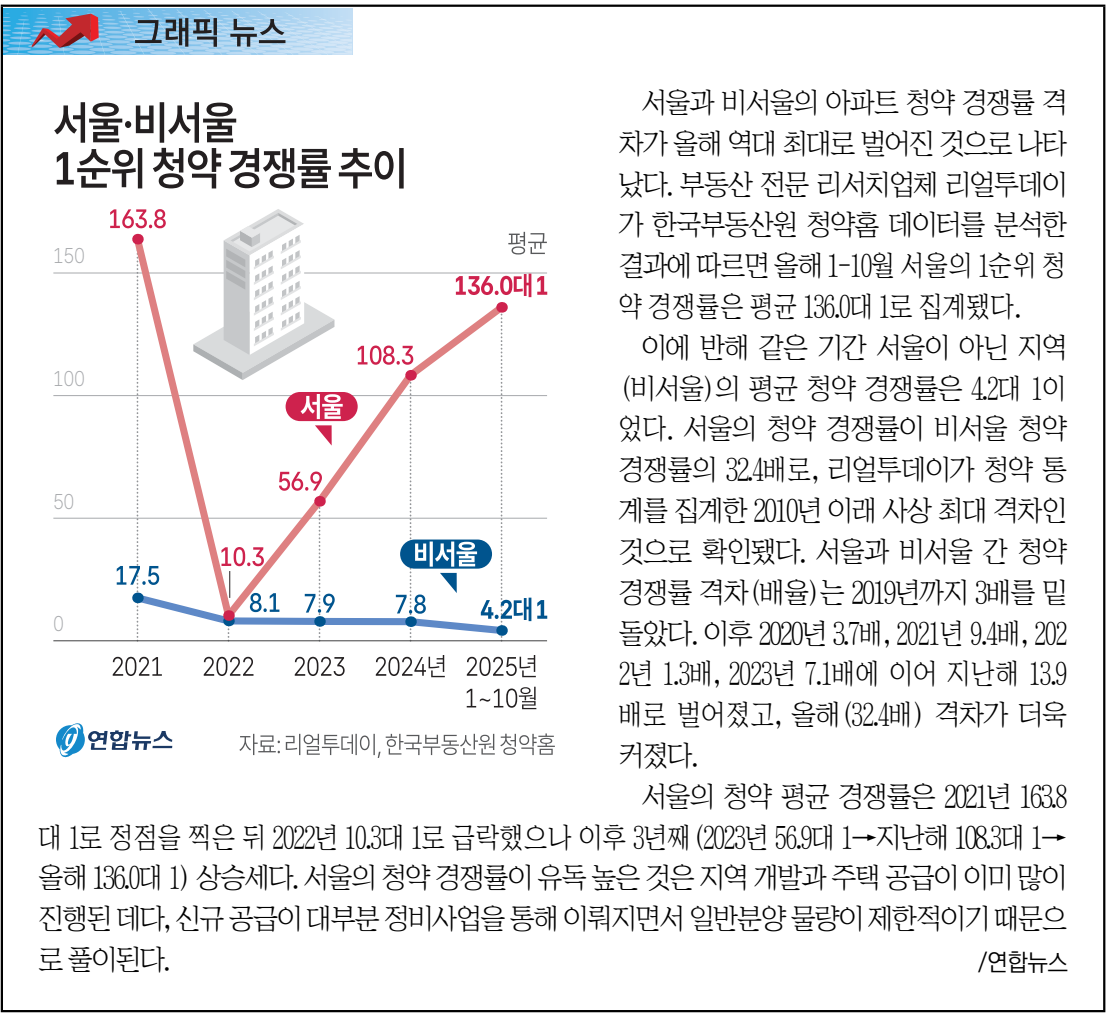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 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

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갔다면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만약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모임을 마치고 전에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결국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후회는 행동한 뒤에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다. 울 연말연시에는 제발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소중한 운전면허증을 술로 말미암은 한순간의 실수로 취소해 뉘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문기선·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